

원안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

원안위 “안전기준 충분히 만족” “공사·성능시험 철저 검사할 것”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 발전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허가 신청 1년여 만인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데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건설 허가 신청 이후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에서 2021년으로 바꾸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해일 최고 해수위

보다 부지 높이가 높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KINS 심사결과에 대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간 사전 검토를 수행했으며,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허균영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후변화나 지형 등 장기적 영향이 꼼꼼하게 검토돼 설계나 운영 이후에도 검사 등 주기적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건설 허가 이후 진행될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남뉴스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한수원은 건설 허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尹, 19~22일 체코 방문...“원전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대통령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

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공식 방문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파벨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및 공식 만찬에도 참석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구축 탄력...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

1조 4천억원 대규모 투자 첫발

전남도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돼 1조4000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정부 핵심시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돼 2872억원 정부 펀드 유지에 성공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민간이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 지원해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2023년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준비한 전남도의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은 정부와 민간 금융시장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은 거쳤으며,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난 6월 정부가 야심차게 지정·발표한 ‘기회발전특구’의 전국 최초 투자 실현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은 여수 간척지

에 총 1조4362억원을 투자해 LNG 저장탱크,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 본격 운영, 오는 2047년까지 20년간 여수 광양만권에 연 300만 t 규모의 LNG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당초 순수 민간사업으로서 2020년 SPC를 설립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은 동부권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1조 4천억 원 대규모 투자가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200만 도민 모두의 쾌거”라며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여수광양 산단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국토 3축 거점으로 제2의 성장 가능”

광주연구원 1주년 정책토론회 지역 미래·장기 발전 방향 제시

광주연구원이 지방소멸 위기를 딛고 산업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12일 청사 대강당에서 ‘광주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연구원 문연희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3대 대표도시 광주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광주는 인공지능(AI) 대표도시·실증도시이자 신재생 에너지 최대 생산권역 중심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 전환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문화 기반 시설(인프라)이 약해 올해 하반기 140만 명 인구선 붕괴가 우려되며 2050년에는 120만 명으로 전망되지만 국토 균형발전 3축 거점으로 제2의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도약을 위해 초광역·초국경 연결성과 서남권 500만 주민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고급 문화·산업 서비스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달빛고속철도 연장과 제주 해저터널 개통·고속도로 확충·무안통합공항 건설 등을 통해 서남권 1시간 경제권과 항공편 일일생활권을 형성하고 복합쇼핑몰·마이스(MICE) 컨벤션 시설·광주 대표 도서관 건립 등 이용 인구 1억명 규모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황성웅 연구위원은 메가시티·5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포용적 가치’ 성장하는 세계도시 광주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1949년 서남부에서 광주시로 개칭하면서 호남 중심도시로 부상한 이후 2050년이 광주의 두번째 대변혁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전세계 도시 596개 중 358번째인 광주와 같은 중급 지방 도시가 성장하려면 메가시티뿐 아니라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쌀값 20만원 보장 포기하겠다는 건가”

전남도·도의회 근본 대책 촉구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산량을 잘못 예측, 쌀값 하락의 발미를 재공해농고도 재고 쌀 물량에 대한 처리 대책을 내놓지 않는데다, 한 달 빠른 안정대책에도 ‘쌀값 20만원 보장’마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에 포함돼야 할 2023년산 쌀 재고량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확기 전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을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 물량으로 매입해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해 쌀 7만 8000 t 이 초

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쌀 수급정책을 수립했지만 뒤늦게 20만 t을 시장격리하고도 15만 t의 재고쌀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쌀값 폭락 사태의 발미를 재공했다”면서 “올해도 최소 40만 t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매년 수입되는 쌀에 대해서도 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시장에 방출되지 않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 384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김문수(민주·신안 1) 농수산위원장 주도로 ‘쌀값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협이 보관중인 재고쌀로 올해 신곡 쌀 매입량·매입가 평가, 보관 공간 등에 차질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재고쌀 부분이 빠진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으로 이제라도 재고쌀을 포함한 추가 과잉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의대 ‘1대학 2병원’ 추진 ▶1면에서 계속

소요 예산은 1000병상 기준 7000억원 가량 들 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타 대학병원 신설 사례 등을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국가가 20~25%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로, 전남도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병원 설립비용의 30% 수준의 예산 지원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또 2개 대학병원 신설로 커지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정부·도의회·대학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지원도 고려할 계획을 밝혔다. 국립의대 신설 지역으로 추천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첨단의과학연구소’ 설립을 제시했다. 첨단의과학연구소는 의과대학·대

학병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공지능(AI) 기반 의학, 첨단과학기술 분야 연구·교육·실습과 의료바 이오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 대학이 공동의대 확약서를 제출하면 용역 기관 추천안은 폐기하고 공동의대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할 수 있다”며 “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건립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목표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약속한다면 공동의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용역기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목포·화순 등에서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10월 중순까지 목표대와 순천대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10월 말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